

4·15 총선 제주시각 후보 초청 토론회 “중국자본 누가 유치했나” 공방

토론회에서는 중국자본 유입과 난개발을 유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네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먼저 포문을 연 고병수 후보는 송재호 후보를 향해 “과거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돈이면 다 된다는 논리로 중국자본 유입을 용인하고, 심지어 카지노도 내국인까지 이용하자고 발언했다”며 “마음대로 분탕질 쳐놓고 이제와서 나탈라라 하고 있다”면서 정책 폐기 의향을 물었다.

“예”라고 대답한 송 후보는 “2006년 제주는 관광객이 500만명으로 정체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발언 취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라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내가 장본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 틀을 만든 것은 민선 2기 우근민 지사와 중앙정부에서 했다. 그리고 추진반장 격으로는 당시 제주도 정책기획관이던 장성철 후보 아닌가”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에 장성철 후보는 “우선 송 후보가 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에 동의한 것에 대해 충격적이다. 도민 합의로 제도화된 정책을 폐기하려면 당연히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폐기가 아닌 친환경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1·3차 산업을 넘는 산업구조 형성과 경제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청년들도 대학교 졸업하면 연봉 5000만원, 1억원 받을 수 있는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정책으로 다음어서 꾸준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희수 후보도 끼어들었다. 박 후보는 “장 후보는 당시 국제자유도시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밀어붙인 제주도 정책기획관이었고, 송 후보도 중국자본 유치 및 카지노 개발을 옹호했다”며 “정치하는 사람은 선무당이 돼서는 안된다. 여기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 중에 현장 정치를 한 사람이 없다. 나는 제주도의회 등에서 해봤다”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공론화’의 범주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박 후보는 “장성철 후보는 2018년 제주도지사 후보 시절 당시 도민 의견이 배제됐다면서 제2공항 정책 결정 과정은 잘못됐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제2공항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을 바꿨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여기에 송 후보도 “박 후보의 발언은 옳은 지적이다. 제2공항 입지가 성산읍이라는 것은 발표가 된 후에야 알았다. 이견 즉 여론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우스갯소리로 제주도민만 몰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장 후보는 제주도 정책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제2공항 용역을 발주한 적 있으면서도, 공론화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가세했다.

이에 장 후보는 “제주사회에서 공론화라는 단어는 제2공항을 성산읍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도민에게 물어보자는 뜻으로 써왔다. 이에 비춰보면 제주에서 공론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제2공항 용역은 당시 제주도가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봐 실시한 것이다. 결과도 현 공항 확장이나 제2공항 신설 등으로 꼭 짊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계치 도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속도

도, 하수처리 현안해결·유입 불명수 차단 TF팀 구성 “과정 투명하게 공개·지역주민과 상생방안 마련할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하수처리장 현안해결 TF팀’과 ‘하수처리장 부하량 저감을 위한 ‘하수처리장 유입 불명수 차단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도내 하수처리장(8개소·24만t)이 대부분 수용능력 한계(처리율 96.8%·2019년 기준)에 달해 증설이 시급하지만 일부 하수처리장은 주민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증설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하수처리장 현안해결 TF팀’은 상하수도본부장을 팀장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도개선,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도, 행정시 부서장 등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 4개 분야·10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개 분야·10개 중점추진 과제는 제도개선, 어촌계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주환경 및 주민건강 개선사

업, 주민지원 요구사항 지원 협력사업 등이다.

‘하수처리장 유입 불명수 차단’을 위한 TF팀은 하수도부장을 팀장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공무원, BTL 운영사 및 관련 전문가 등 2개반·25명으로 구성해 1단계로 금년도에는 관로조사(연막시험, CCTV), 사례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2단계(2021~2023년)로 유지관리 계획수립과 하수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1일 평균 하수유입량이 23만1700t으로 하수처리용량 대비 96.8%로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어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병행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에 포함된 불명수를 파악해 차단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에 오접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통해 하수처리장 부하량을 감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양문 도상하수도본부장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 없이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기에 따라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주민지원사업 협약체결 등 지역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100만 인구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방문객 체온측정 31일 제주시 전농로에서 삼도1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정의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 출범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31일 ‘코로나19 위기극복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의당 제주선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고병수 후보와 고은실 제주도의회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제주선대위는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고 있을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와 노약자, 돌봄 가족, 이주민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힘들어 하는 도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치의 존재 이유, 정치의 역할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사회 불평등을 외면한 민주당, 박근혜 탄핵 이후 한마디 반성 없이 이름만 바꿔던 미래통합당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면서 필승 의지를 다졌다.

제주선대위는 또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내용은 미흡하다”면서 “정부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선대위는 “제주에서부터 낡은 기득권 정치체제를 깨는 균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비양도 1·2도항선 공유수면 사용기간 연장

제주시 “양 선사 운영 합의도출 전제 1개월 더”

제주시가 비양도 1도항선사와 2도항선사를 상대로 마을 항구 시설 사용 기간을 잠시 연장해줄기로 했다.

31일 두 선사 측에 따르면 제주시는 비양도전년랜드(주)와 비양도해운(주)에 대한 비양도 항구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을 오는 4월30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두 선사는 ‘오는 4월말까지 도항선 운영 방안에 대해 양측이 서

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 23일 시에 제출했다. 또 이 협약서에는 비양도해운은 전년랜드가 오는 4월 30일까지 마을 항구 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만약 4월말까지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양측이 4월 이내에 도항선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들의 공유수면 기간은 4월 30일을 끝으로 연장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비양도 도항선 취항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등 마을 내 갈등이 계속되자 두 선사를 상대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3월 31일 만료하는 양측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모두 연장하지 않고, 대신 한림항-비양도 항로에는 행정선을 띄우겠다고 통보했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참여환경연대 '7대 정책' 질의서 후보자들에 보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상대로 7대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시한 7대 정책은 ▷가칭 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 설치 ▷도민 공론화 제도 폐지화

▷도민 발안 제도 폐지화 ▷현행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대한민국 환경수도로 전환 ▷환경수도 육성 소요재정 마련을 위한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과도한 지가·주택 가격 상승 차단 위한 보유세 강화 ▷주거 복지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 등이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같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4월 8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각 후보 측에 요구했다.

이상민기자

三姓祠 春期大祭

새봄을 맞이하여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에서는 耽羅(毛羅)를 창시하신 三乙那의 위업을 기리고 추원하는 2020년도 삼성사 춘기대제를 다음과 같이 봉향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20년 4월 10일(금) 10:00
- 장 소 : 삼성사 삼성전 (제주시 소재 삼성혈)
- 현 관 : 초헌관 고갑수(高甲洙) (서울특별시)
아헌관 양병식(梁柄植) (서귀포시)
종헌관 부봉오(夫奉五) (제주시)

춘기대제 종료 후 제26회 탐라문화상 시상식과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탐라문화상 문화예술부문 수상자 오창명(吳昌命)	탐라문화상 효행부문 수상자 박정숙(朴貞淑)


※ '코로나19' 비상사국으로 도민 및 제족,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음복도 생략하여 봉향하오니, 제향에 참석 하지 않아도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
이사장 고 정 언

오션스위츠 제주호텔 개관 10주년

오션스위츠 제주호텔(대표이사 김형태)은 오는 4월 1일 개관 10주년을 맞이 한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불과 8분 거리에 위치한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은 아름다운 제주 바다와 인접해 있으며, 제주의 전통문화, 해변공연을 비롯한 수준높은 문화시설, 관광과 레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OCEAN SUITES JEJU HOTEL